

▣ 정부시책 및 동향 ▣

산업자원부, 부품·소재산업 세계 초일류 육성

정부는 부품·소재를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자, 자동차, 기계, 화학, 금속 등 5개분야에서 세계 5위권의 초일류기업을 부문별로 1개사 이상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10월 28~31일 일본에서 대규모 부품·소재전시회를 개최하는 한편 투자유치단을 파견키로 했다.

정덕구 산업자원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를 갖고 부품·소재산업의 종합적인 육성대책 수립을 위해 이달말 '부품·소재산업 대토론회'를 개최, 각 부문별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관협동 발전기획단 구성

또 이달 구성되는 '민관협동 부품·소재산업 발전기획단'에서는 이를 토대로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정책 방향과 세부실천계획을 11월까지 매듭지을 계획이다.

정장관은 "지금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직적 종속관계였다"며 "중소기업형 산업인 부품·소재산업의 기술혁신을 통해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자금, 기술, 판로면에서

지원조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부품·소재 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장관은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생존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어음결제에 얽매인 자금구조, 대기업에 대한 높은 기술의존도, 모기업과의 수직적 수급관계에 의한 판로 제한 등 세가지 종속관계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기술지원도 현재의 자금일변도에서 탈피, 정보·인력·자금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판로개척을 위해 배타적 수급관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체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정보·자금 등 종합지원

정부는 현재 세계 경제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추세속에서 완제품 중심의 경쟁구조가 부품·소재 중심의 경쟁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이 분야가 신기술·신제품을 창출하는

원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부품·소재 산업에 있어 기술혁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정장관은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이 과거 완제품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인해 핵심부품을 해외 공급선에 의존하는 '허리가 취약한 산업구조'라고 지적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시책 마련 및 민간주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정장관은 엔고추세가 지속되면서 일본이 주요 부품·소재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특히 최근 고기술 부품·소재산업의 해외진출 대상으로 우리나라와 대만이 물망에 오르는

만큼 적극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日 해외진출 적극 모색

그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특히 현대의 기아 자동차 인수, 대우·삼성의 매각 추진 등 구조조정으로 인해 산업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자동차부품업체가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부품업체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0일 자동차공업협동조합에서 모임을 갖고 부품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자구노력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정부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산업자원부, 기업 기술담보대출 길 열어

기업이 기술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한 산업기술 전문평가기관이 정부와 은행 공동으로 설립된다.

지난 21일 산업자원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산하 산업기술평가원의 기술력 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 가칭 '산업기술이전거래 시스템社'를 연내에 설립할 계획이다.

산업기술이전거래 시스템社는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의 가치를 평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기술력 담보대출을 알선해 주는 일

을 맡게 된다.

또 해당기업이 원할 경우에는 기술력을 다른 기업에 이전해주는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정부가 전문기술평가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사정이 어려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금융기관의 돈이 제때 지원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산자부는 기술평가업무를 하고 있는 산업기술평가원,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와 인력을 새로 생

기는 '산업기술이전거래 시스템社'에 통합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지난 17일 은행연합회관에서 관련 실무자 협의회를 열었다.

새로 설립된 산업기술 전문평가회사의 자본금은 100억원으로 정부와 국책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이 공동출자해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와 은행간 출자비율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산자부는 관련법규가 정비 되는대로 일단

올해 안에 회사를 출범시키고 내년 6월부터 업무를 시작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회사가 설립되면 은행 등 금융기관은 공신력있는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 발급된 기술평가서를 근거로 기술력담보 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기관에 흠어져 있는 기술력 평가업무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 통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산업기술을 사고파는 기술이전거래를 중개하는 기능이 중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자원부, 산업피해 구제제도 적극 활용 공동대응책 모색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1일 업종별 단체와 산업피해구제제도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피해구제지원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전기공업진흥회, 철강협회 등 43개 업종별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무역위원회와의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날 산업피해구제제도중 세이프가드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선진국의 수입규제 동향 및 산업피해구제제도에 관해 소개했다. 무역위원회는 긴급수입제한제도가 수출국의 공정한 수출행위에 의한 수입이지만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세를 인상

하거나 수입을 제한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출범으로 무역자유화와 대외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농축수산물의 경우 단계적 수입 자유화로 산업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 참석자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유일한 국내산업 보호수단인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적극 활용, 산업피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우리나라 산업피해구제제도는 지난 '87년 무역위원회가 설치된 다음 본격화 됐으며 특히 WTO가 출범한 이후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신청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7년부터 지난 8월말까

지 국내 기업의 산업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76건으로 업종별로는 화학이 25건으로 수위를 차지했으며 농산물 14건, 기계 7건, 전자 7건 등이다.

산업자원부, 소형정밀모터 규격·품질 국제수준 표준화

소형정밀모터의 제품 규격 및 품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표준화함으로써 1천억원 규모의 수입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美·유럽등 선진국 추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캠코더, 컴퓨터, 자동화기기 등 21세기 지식기반 산업기기의 부품 소형화가 경쟁력의 주요 요건으로 부각됨에 따라 소형정밀모터의 부품 표준화와 성능평가 기술의 개발·보급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형정밀모터에 대한 국제 규격은 제정되지 않은 실정이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형정밀모터의 성능평가방법에 대한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전기표준위원회(IEC)도 소형정밀모터와 자동제어용 모터에 대한 국제규격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술표준원 IEC의 국제규격 제정작업이 완료되면 유럽에 수출하는 소형정밀모터도 이 규격의 적용을 받아 향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소형정밀모터의 제품 규격 및 품질 기준을 국제 규격 수준으로 표준화함으로써 수출경쟁력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약 1조원 규모의 세계 시장에 진출함은 물론 1천억원에 달하는 국내 시장을 점유함으로써 수입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기술표준원의 설명이다.

지난 5일 시작된 소형정밀모터의 부품 표준화 및 성능평가 기술개발 사업은 오는 2002년 4월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되며 IEC 국제규격의 부합, 소형정밀모터의 부품 및 설계기준 표준화, 성능평가 기술의 표준화, 설계기술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보급 등을 추진하게 된다.

재정경제부, 제조물책임법 시행 불투명

제조물책임법(PL)의 2001년 시행이 관계 부처간의 이견으로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일 올해 법을 제정한 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제조물책임법이 업계와 산업자원부 등의 반대로 시행시기가 불확실해졌다고 밝혔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생겼을 경우 제조자가 자신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제도로 소비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추진돼 왔다.

재경부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지난 7월부터

법안 입법예고를 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으나 산업자원부가 유예기간을 1년이 아닌 3년으로 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선진국은 물론 중국이나 필리핀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여서 시행시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소멸시효를 손해 및 제조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조물을 유통시킨 날로부터 10년이 되도록 법안을 만들었으며 다음달 중으로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달청, '복수예비가격제' 전면 시행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정부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결정방법을 개선, 복수 예비 가격제도를 지난 9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조달청이 시행하는 복수 예비 가격제도는 모든 정부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 입찰시 예비 가격기초금액을 입찰일 7일전에 민원실과 인터넷에 사전 공개한다. 현행 다양한 예정가격작성 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새로 마련되는 예비 가격기초 금액에 근거하여 전산 프로그램으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장

에서 입찰자중 4인을 선정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조달청은 이 제도의 시행과 예비가격기초금액의 공개로 예정가격 사전담합을 둘러싼 문제점이 원천적으로 해결되어 입찰집행시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예정가격예측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주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청, 기초 공용부품 해외인증 지원

중소기업청은 수입대체효과가 큰 기초부품 50개를 선정해 이들 부품 생산업체 300개에 대해 해외유명규격 제품시험 및 인증절차를 대행하고 인증비용의 70%를 지원해 줄 방침이다.

26일 중소기업청은 공통으로 사용되는 기초부품중 해외규격을 획득하지 못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부품에 대해 해외 규격인증 획득을 이같이 지원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주요 공용부품이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수입대체효과는 물론 기초부품의 독자적인 수출도 가능해진다. 수출완제품이 외국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부품도 동일한 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나 대부분의 국내 기초부품들이 해외규격인증을 받지 못해 수입품을 사용해 왔다. 또 기초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대개 규모가 영세하고 인증을 받아야 할 규격수가 많아 인증획득을 기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